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연세대학교)

-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는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사회단체 참여율도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 일반화된 신뢰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공공기관 중에서 군대가, 민간기관 중에서는 의료기관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다.
- 사회적 지지는 큰 변화가 없이 고령층의 사회적 지지 부족이 두드러지며, 가족 또는 친척과의 사회적 교류 빈도가 줄어든 반면, 가족과 친척 이외 사람과의 교류는 늘고 있다.
- 세대 내 및 세대 간 상향이동의 기회에 대한 기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낮은 수준을 보이며, 젠더관계 및 언론보도에서의 공정성 평가가 낮아졌다.

사회통합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활발하게 유지되며, 사회적 불평등, 불공평과 갈등은 줄어 조화롭고 원만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것이다. 사회통합에서 최근 나타난 변화와 동향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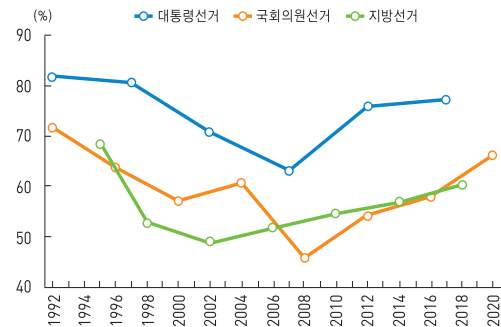
사회·정치적 참여의 변화와 영향 요인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 모두 2000년대 중반까지 투표율이 하락하다가 이후 높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선거별로 투표율을 비교하면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대체로 70%가 넘어 가장 높은 반

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선거는 50~60% 사이의 투표율을 보인다.

가장 최근 선거인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2008년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인 46.1%를 보인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이어서 66.2%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58.0%에 비해 8.2%p 높아진 것이다.

[그림 XI-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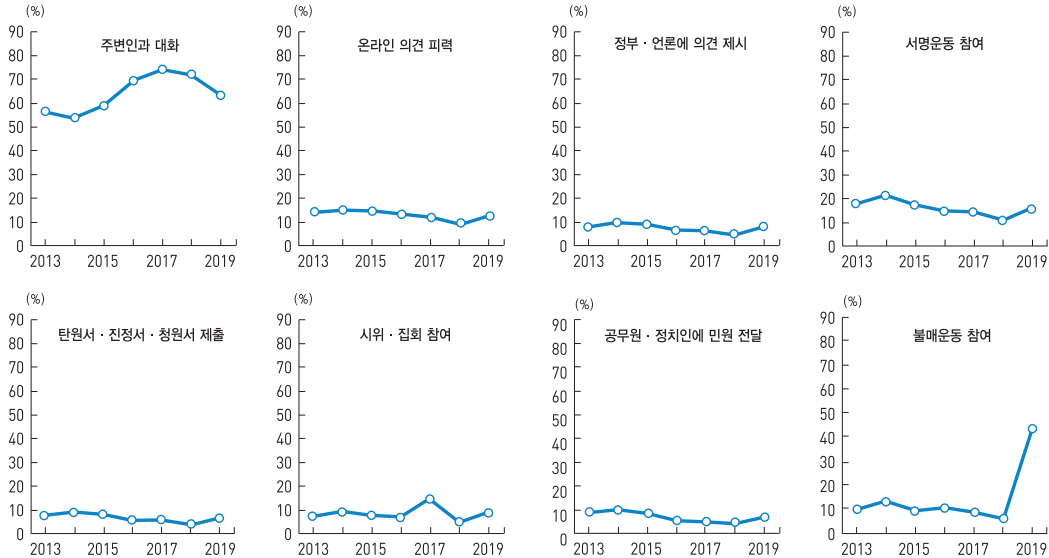


주: 1) 투표율=(투표자 수÷등록선거인 수)×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그림 XI-2]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선거 이외의 정치참여 변화를 보여준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2013년과 2017년에 10%에 못 미쳤던 불매운동 참여 비율이 43.5%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것은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그림 XI-2]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2019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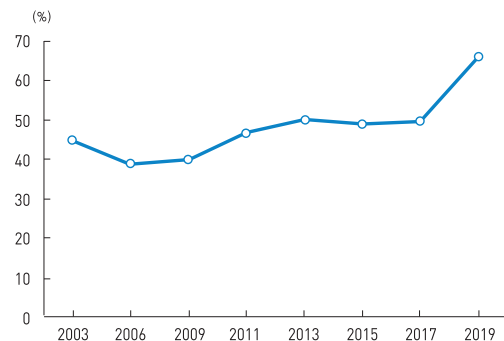
국민 다수가 참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정치참여 유형들의 참여 비율을 살펴 보면 2013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촛불시위가 활발했던 2017년에 비해 보면 주변인과의 정치 및 사회 관련 대화가 74.1%에서 63.1%로 11.0%p 줄었고, 시위·집회 참여 또한 14.4%에서 8.9%로 5.5%p 참여 비율이 낮아졌다.

[그림 XI-3]에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단체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에 대해 회원으로 가입되어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단체 참여율은 일관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2010년대 들어 참여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

가, 2019년에는 66.1%로 2017년의 49.7%에 비해 16.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3] 사회단체 참여율, 2003-2019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단, 2003-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XI-4]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여러 사회단체들에 대한 회원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단체는 동창회, 향우회 등과 같은 연고적 친목단체이며 2013년 이후 큰 변화 없이 2019년에는 47.8%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동호회와 종교단체의 참여율이 높는데, 2013년과 2019년 사이 동호회는 27.3%에서 1.8%p 늘어서 29.1%인 반면, 종교단체는 27.3%에서 5.5%p 줄어서 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공공모임 역시 참여가 줄어서 2013년 19.0%였던 것이 2019년에는 참여율이 4.8%p 낮아진 14.2%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조사된 자원봉사단체와 기부단체의 경우 2015년 16.5%에서 2019년 14.0%로 다소 낮아졌다. 정당, 노동조합 혹은 사업자단체, 그리고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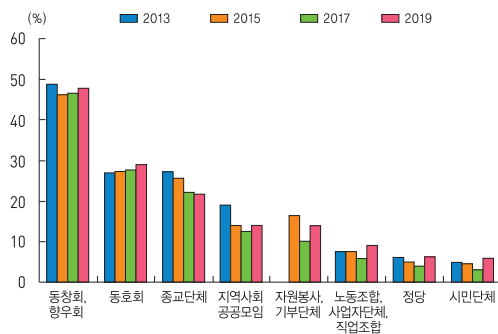
단체는 모두 10%에 못 미치는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사회적 신뢰의 변화

일반화된 신뢰는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 관계를 불문하고 사회 성원 일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일반화된 신뢰 수준의 추이를 제시한 [그림 XI-5]를 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72.2%와 73.6%였던 것이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65.3%에서 69.2%로 3.9%p 높아졌지만, 2019년에는 다시 66.2%로 3.0%p 다시 하락했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각 제도들이 자신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의미한다.

[그림 XI-4]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율, 201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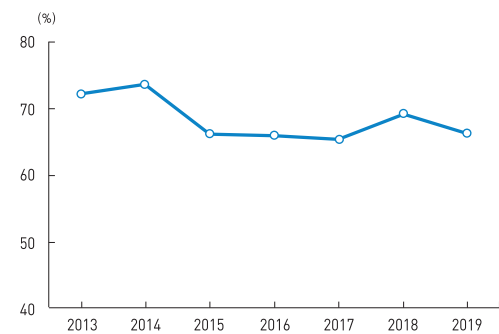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현재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참여율의 경우 2015년부터 조사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5] 일반화된 신뢰 수준, 2013-2019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일반화된 신뢰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각 제도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그림 XI-6]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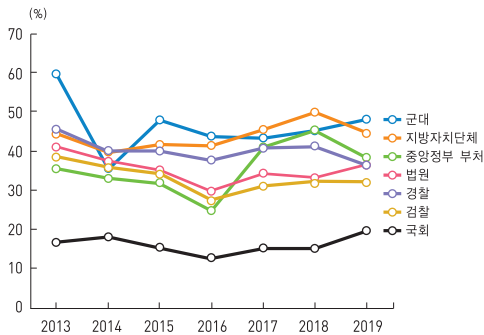
공공기관이나 제도들 중에서 가장 낮은 신뢰 수준을 보이는 국회는 2010년대 중반까지 신뢰가 하락해서 2016년 12.6%까지 떨어졌지만 2019년에는 그보다 7.1%p 높아진 19.7%가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다음으로 낮은 신뢰를 받

는 기관은 검찰로 2019년에 32.2%의 신뢰를 받았다. 2010년대 중반까지 신뢰가 하락하다가 이후 조금씩 높아지는 패턴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인 기관은 군대로 2013년 59.6%에서 2014년 34.5%로 25.1%p 떨어진 후 다시 2015년 47.7%로 올라 2019년에는 48.0%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다. 중앙정부 부처 역시 2016년 24.6%까지 하락해서 국회 다음으로 불신받는 기관이었는데 2017년 40.8%, 2018년 45.3%까지 상승했으며 2019년에는 7%p 하락한 38.3%의 신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신뢰도가 하락한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부처 외에도 지방자치단체(49.8%→44.9%), 경찰(41.2%→36.5%)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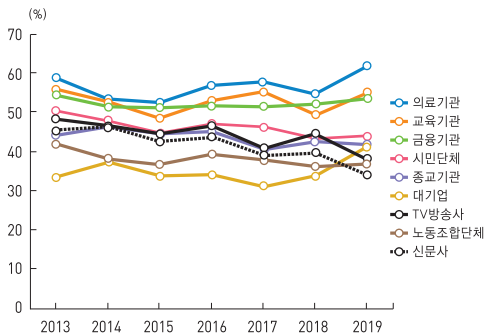
민간기관이나 제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기관은 의료기관으로 2019년 62%의 신뢰를 받았다. 반면 가장 낮은 신뢰를 받은 기관은 신문사로 2019년에 34.2%의 신뢰를 받았다. 신문사는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까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계속 높아져 2018년 2.7%p 상승한 33.9%, 2019년에는 7.5%p 상승한 41.4%를 보였다. 신문사와 함께 하락세를 보이는 민간기관으로는 노동조합(36.8%), 방송사(38%), 종교기관(41.7%), 시민단체(44.1%) 등이 있다.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받는 민간기관으로는 의료기관 외에도 금융기관(53.5%), 교육기관(55.1%) 등이

[그림 XI-6]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 2013-2019

1) 공공기관이나 제도



2) 민간기관이나 제도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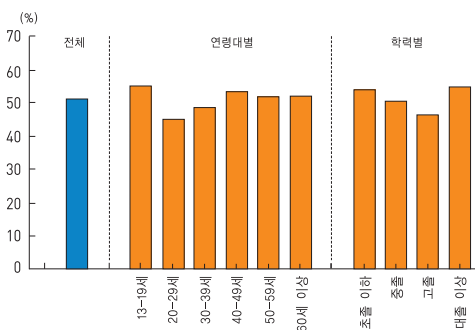
2)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해당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있다. 민간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의료기관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조사」에서는 2019년부터 한국 사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화된 타인에 대한 신뢰와 달리 우리 사회에 대해 얼마나 희망적이고 선의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절망적이고 냉소적으로 보는가를 의미한다. [그림 XI-7]에 나타난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중간 수준인 5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및 사회적 배경에 따라 비교해보면 연령대별로는 10대가 가장 신뢰가 높아서 54.7%가 신뢰하고 다음이 40대로 53.3%인 반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로 절반에 못 미치는 45.1%이며 다음으로 낮은 연령대는 30대로 48.6%이다. 학력별로 비교하면 고졸 학력 소유자들이 가장 낮은 46.3%를 보인다.

[그림 XI-7]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 2019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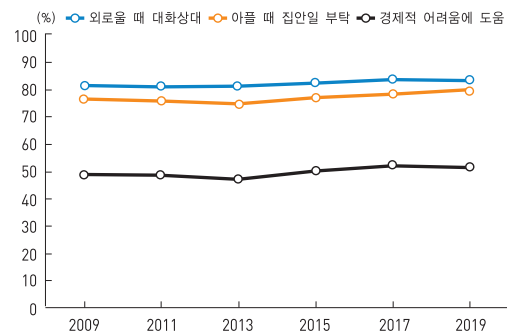
2)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9.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변화

[그림 XI-8]은 「사회조사」에서 사회적 지지(support)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가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2009년부터 격년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외로울 때 대화할 사람이 있는 비율로 2019년 83.3%가 대화 상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09년 81.3%에서 2.0%p 늘어난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비율로 2019년 79.6%이며 이는 2009년의 76.6%에 비해 3.0%p 높아진 것이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비율로 2019년 51.4%만이 있다

[그림 XI-8] 사회적 지지 수준, 2009-2019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단, 2009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2011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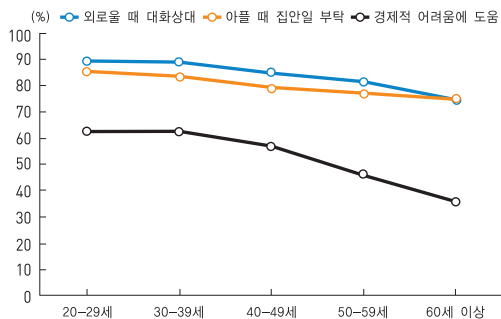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고 응답했다. 이는 2009년 48.6%에서 2.8%p 늘어난 것이다.

2019년 조사결과를 연령대별로 비교해서 어떤 연령대가 사회적 지지의 결여가 심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XI-9]를 보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지지 모두 20-30대가 가장 높은 반면, 40대 이후 낮아져서 60대 이상이 가장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울 때 대화상대가 있다는 비율은 20대의 89.3%에 비해 60대 이상은 14.8%p 낮은 74.5%였으며,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비율 역시 20대의 85.7%에 비해 60대 이상은 10.5%p 낮은 75.1%였다. 연령대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비율로 20대가 62.7%인 반면 60대 이상은 27.2%p 낮은 35.5%에 불과했다.

사회적 관계에서 소수자 혹은 약자를 얼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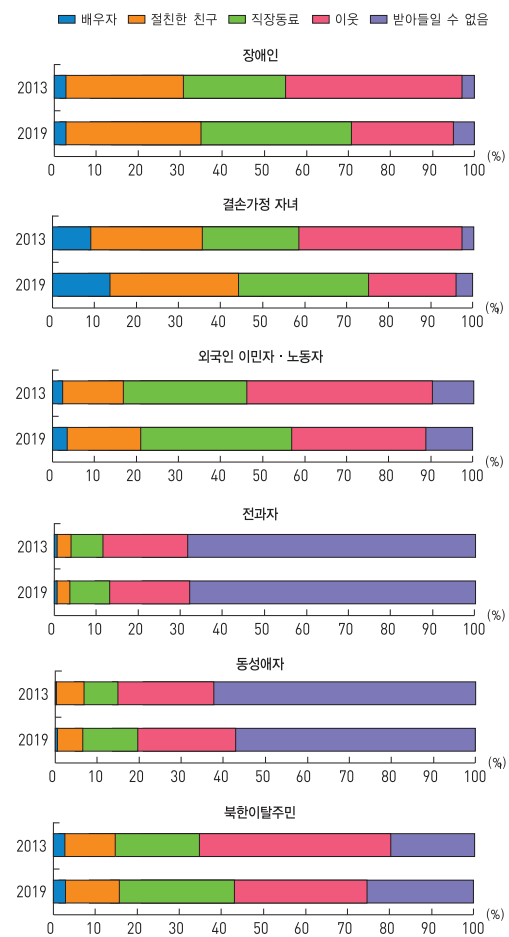
[그림 XI-9]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수준, 2019



주: 1) 각 통계치는 해당 연령대 조사대상자 중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9.

포용할 수 있는가는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소수자 혹은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질문한 결과 각 집단에 대한 응답 결과가 [그림 XI-1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XI-10]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3,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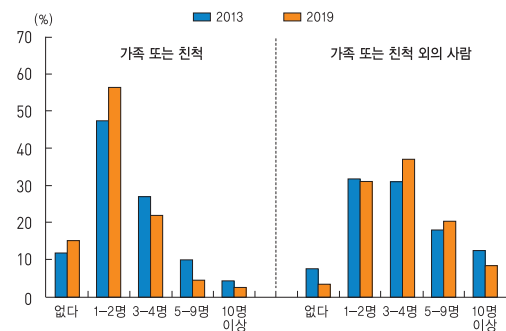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응답은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장 가까운 선택지에서 절친한 친구, 직장동료, 이웃의 순으로 멀어진다. 이들 응답의 누적 비율을 100%에서 뺀 값이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다. 장애인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보다 가까운 관계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비율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절친한 친구와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늘었다. 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9년 절친한 친구와 직장동료뿐만 아니라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도 늘었다.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외국 이주민 역시 절친한 친구와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늘었고, 탈북 주민의 경우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늘었다. 전과자와 동성애자의 경우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 2019년에 각각 68.0%와 57.1%로 높다. 2013년에 비하면 전과자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지만 동성애자의 경우는 62.1%에서 5.0%p 줄어든 것이다. 동성애자의 경우 특히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늘었다.

가족이나 친척, 혹은 그 밖의 사람들과 얼마나 교류를 많이 하는가를 파악하고자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조사 전 하루 동안 몇 명의 사람들과 연락했는가를 질문한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의 연도별 비교가 [그림 XI-11]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는 2013년에 비해 2019년

에 없다는 응답과 1-2명이라는 응답이 각각 14.9%(3.2%p 증가)와 56.4%(9.0%p 증가)로 늘었고, 반대로 3-4명, 5-9명, 10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모두 줄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과 교류는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없다는 응답과 1-2명이라는 응답이 각각 3.2%(4.2%p 감소)와 31.1%(0.6%p 감소)로 줄어들었고, 3-4명, 5-9명이라는 응답은 늘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11] 사회적 교류 빈도, 2013, 2019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여기서 접촉이란 전화, 우편, 인터넷, 대면 등의 방식으로 귀하와 개인적으로 인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함. '가족 또는 친척'의 경우 동거자는 제외되며, '가족 또는 친척 외의 사람'의 경우 업무상 접촉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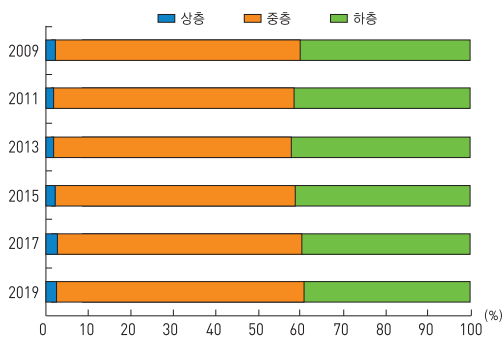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불평등, 차별과 불공정 인식의 변화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를 「사회조사」에서 격년으로 물어본 결과가 [그림 XI-12]에 제시되어 있다. 2019년에

는 상승에 속한다는 비율이 2.4%, 중층에 속한다는 비율이 58.5%, 하층에 속한다는 비율이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이 중층과 하층의 비율이 60:4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XI-12] 주관적 계층 인식,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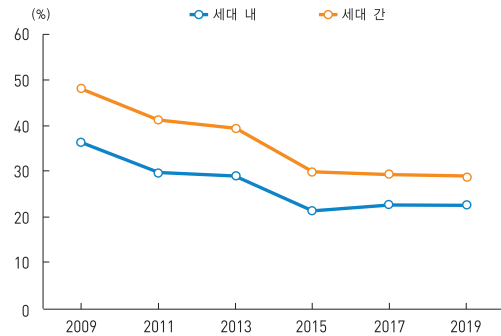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계층간 상승 이동 가능성 인식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난다. 「사회조사」에서는 세대 내 이동 즉 본인 자신의 상승 이동과 세대 간 이동 즉 본인에 비해 자녀가 상승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림 XI-13]은 2009년부터 격년으로 2019년까지 세대 내와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세대 내와 세대 간 이동 가능성 모두 긍정적 응답 비율이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낮아지고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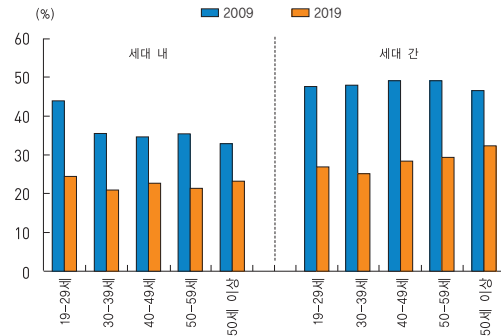
내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2009년 36.4%에서 2019년 22.7%로 13.7%p 하락했다. 세대 간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역시 2009년 48.2%에서 2019년 28.9%로 19.3%p 하락했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적 지위를 대

[그림 XI-13]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 2009-2019

1) 연도별



2)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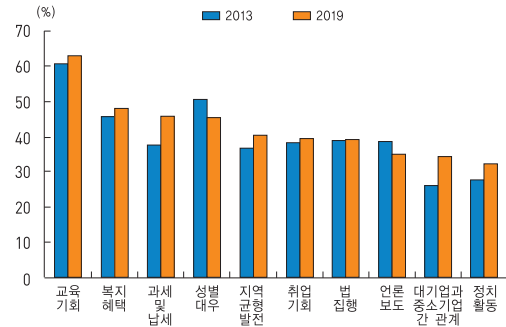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세대 내 계층 이동 가능성은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자신의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물림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특히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도 세대 내 및 세대 간 상승 이동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30대의 자신과 자녀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각각 21.1%와 25.3%에 불과하다.

[그림 XI-14]에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공정성에 대한 여러 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점이다.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2%가 교육기회가 공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소폭(2.4%p) 증가한 것이다. 공정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낮은 분야는 정치활동으로 2019년에 32.2%였으며, 역시 2013년에 비해 소폭(4.5%p) 증가했다. 그 밖에 과세와 납세(37.6%→45.8%), 복지혜택(45.8%→48.2%), 지역간 발전(36.9%→

[그림 XI-14]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 2019



주: 1) 만 19~6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 공정성 인식은 조사대상자 중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당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공정한지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40.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26%→34.4%) 등에서도 2013년에 비해 2019년 공정하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한편 취업기회(39.4%), 법 집행(39.3%)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성별 대우(50.5%→45.5%)와 언론보도(38.6%→35.1%) 등에서는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공정하다는 응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